

민생물가 특별관리  
관계장관 TF  
(공개, ③번 안건)

# PC · 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

2026. 4. 9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순서

I. 현황 ..... 1

II. 대응과제 ..... 2

## I 현 황

### □ (가격 동향) 글로벌 칩플레이션(D램) 심화로 PC·노트북 가격 상승세

- **(D램)** 반도체 업계의 HBM 생산 집중에 따른 범용 D램 초과수요 등으로 D램 가격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\*\*

\* D램 가격(\$, '25.1Q→'26.1Q) : (DDR5 16Gb) 3.9 → 29.5 (DDR4 8Gb) 1.4 → 11.7

\*\* 국내(용인<sup>SKH</sup>·평택<sup>삼성</sup>), 해외(美 아이다호<sup>Micron</sup>) 신규 팹은 '27년 가동될 예정이나, 초도물량 안정화 기간 감안 시 '27년말까지 공급 증가가 제한적일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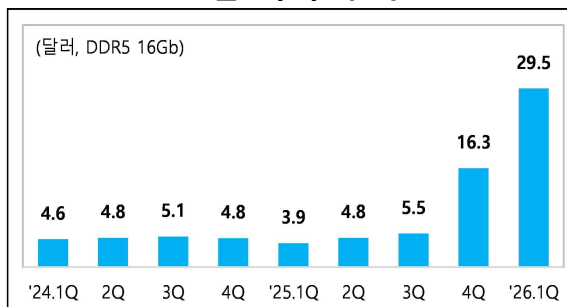
- **(PC·노트북)** D램 가격 상승 등으로 주요 제조사의 완제품 PC·노트북 소비자 판매가격도 동반 상승\*

\* A社 C모델 가격(만원, 16인치, 램32Gb, 1TB) : ('25.9) 216 → ('26.4) 255 <+18.1%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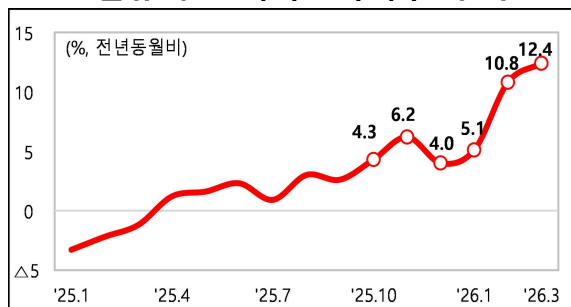
B社 D모델 가격(만원, 15.6인치, 램16Gb, 512GB) : ('25.9) 137 → ('26.4) 145 <+5.8%>

\*\*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(% 전년동월비) : ('25.10) 4.3 (11) 6.2 (12) 4.0 ('26.1) 5.1 (2) 10.8 (3) 12.4

< D램 가격 추이 >



<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>



⇒ PC·노트북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디지털 양극화(digital divide) 우려

#### < PC·노트북 생산 및 유통 경로 >

- (생산) 韓美대만 등에서 부품 패키징 → 글로벌 거점(베트남·중·인도 등) 중심 완제품 생산
- (유통) 해외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제조사를 통해 국내로 역수입되어 ①제조사 직판, ②대리점 계약, ③양판점의 3개 채널로 유통

⇒ 온라인 경쟁, 재고부담 등으로 PC·노트북 매점매석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

## □ (정책 현황) 국가기관의 불용 PC 재활용 미흡, 취약계층 지원규모 부족

- 중앙정부의 불용 PC는 매각·무상양여·무상지원·폐기 등 가능  
→ 처분 방법간 우선순위나 선·후행 절차 기준 부재
  - 내용연수 경과시 불용처리 여부는 각 기관의 정보화기기 담당부서가 자체 판단함에 따라 실제로 사용가능한 제품도 폐기될 여지 有
    - \* '25년 불용처리된 PC 중 폐기된 PC(2.2만대)의 약 58%는 별도의 수리·정비 작업을 거치면 기본 업무 등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
  - 한편, 공공기관의 불용 PC도 취약계층 PC 지원사업에 연계 미흡
-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·노트북 구매지원 사업이 있으나, 낮은 지원단가 등으로 최근 기기 가격 상승세 반영에 한계

### < 시도교육청 PC·노트북 구매지원 사업 주요내용 >

- (지원대상) 통상 기준중위소득 50~80% 이하 가구 학생(교육청별 상이)
- (지원방식) 교육청이 PC·노트북을 직접 구매하여 학생에 지급
- (지원단가) 교육부가 1인당 기준금액('25년 기준 104.2만원) 제시 → 각 교육청은 이를 참조하여 개별적으로 지원단가 결정(예: 경기도 140만원)

## Ⅱ 대응과제

- ◇ PC·노트북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취약계층·학생의 구매부담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양극화(digital divide) 해소
  - ①PC·노트북 시장 불공정행위 예방, ②국가기관 불용 PC를 활용한 지원 활성화, ③취약계층·학생에 대한 PC·노트북 지원 확대 등 추진

### ① PC·노트북 시장 조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예방 (산업부·공정위)

- D램 및 PC·노트북 시장에서의 유통·수급상황 등에 대한 실태 점검 추진
  - 이상징후 발견시 법 위반여부 조사 실시 및 엄정 조치

② **국가기관 불용 PC를 지방정부에 무상양여** → **취약계층 적극 지원**  
(재경부·과기정통부·조달청·지방정부)

※ 노트북(내용연수 경과시 배터리 수명저하, 부품교체 불가 등으로 재활용 곤란), 태블릿(출시 후 운영 체제 업데이트 기간 6~7년으로, 내용연수 경과 후 사용기간 짧음)은 지원품목에서 제외

○ **(중앙정부)** 내용연수\* 경과한 불용 PC의 재활용(무상양여)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

\* 주요 전자제품 내용연수(조달청 고시) : (데스크톱) 5년 (노트북) 6년 (태블릿) 5년

- 무상양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지침(조달청 고시) 개정\*

\* 내용연수 경과 PC 처분시 무상양여를 우선 검토하고 폐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, 무상양여를 받은 기관·단체(지방정부 등에서 취약계층에 재양여 허용 등

-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에서 내용연수 경과 PC 현황을 정기 조사하고, 지원 가능한 PC를 선별

- ‘사랑의 그린 PC’ 및 ‘AI 디지털 배움터’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무상양여

< PC 지원 관련 주요 사업 >

▶ (사랑의 그린 PC) 지방정부·공공기관·기업 등에서 버려지는 PC를 재활용하여 취약계층(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및 지원단체)을 지원(지방정부 자체 사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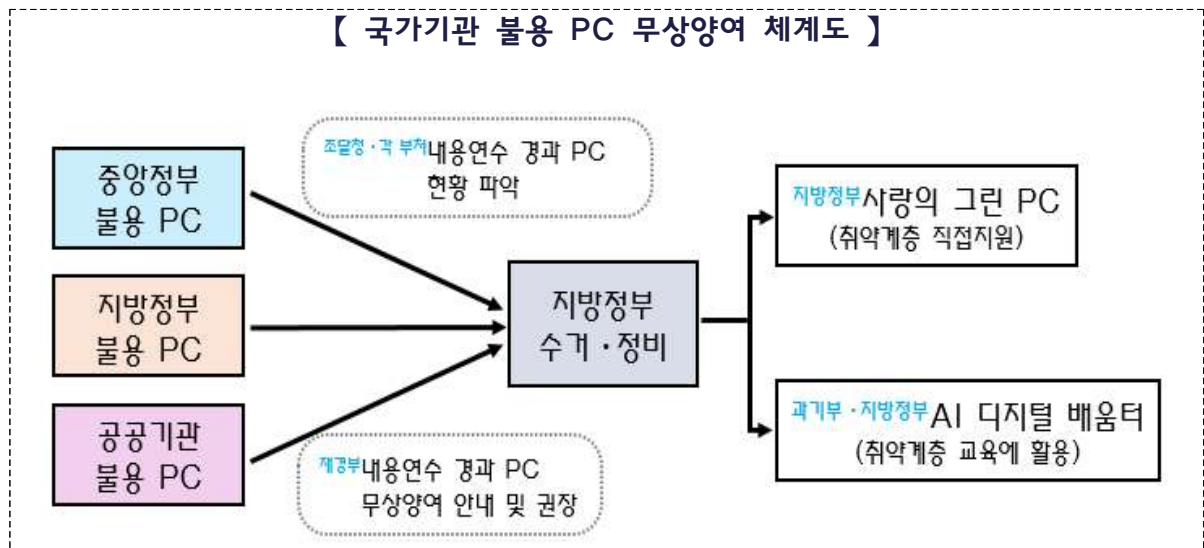
▶ (AI 디지털 배움터) 장애인·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으로 AI·디지털 역량교육(스마트폰·컴퓨터·키오스크 등 사용, 생성형 AI 활용방법 등) 지원(과기정통부·지방정부 협력 사업)

○ **(지방정부)** PC 수요(사랑의 그린 PC, AI 디지털 배움터 등)를 파악하고, 무상양여받은 기기를 정비\*하여 취약계층 등에 전달

\*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사랑의 그린 PC 사업 추진시, 10년 이내 출고제품을 대상으로 별도 수리·정비 후 취약계층 지원 중

○ **(공공기관)** 공공기관 불용 PC도 취약계층 지원 및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, 지방정부에 대한 무상양여를 적극 권장\*

\* 공공기관에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양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



### ③ 취약계층·학생에 대한 PC·노트북 지원 확대 (교육부·교육청)

-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, '26년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·노트북 구매지원 사업 확대
  - 추경안 확정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(4.8조원)을 활용,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편성\* 유도(교육부)
  - \* 시도별 자체 기준, 가용 자원, 지방정부 유사·중복사업 등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 예정
  - 최근 PC·노트북 가격 상승세를 감안하여 1인당 지원 기준 단가('25년 교육부 기준금액 104.2만원) 상향 조정\*(교육부·교육청)
  - \* 교육부가 협조문을 통해 기준금액 상향 공지 → 각 교육청이 지원단가 상향 조정
- 교육부·교육청의 AI·디지털 교육 활성화 정책에 따라 초·중등 학생 1인 1디바이스(노트북·태블릿) 보급도 차질없이 추진
  - \* '25.12월 기준 약 440만대 보급하여 전국 초3~고3 학생 1인당 1.01대 지원 중

👉 관계부처 협조 下 PC 등 시장상황 모니터링 + 지원사업 내실 있게 추진